장마철 대비 하수도 준설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19일 운암동에서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하수도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CNC 선거비 수사 정치권 정조준

검찰, 수사팀 대폭 보강… 이석기 회기전 조사할 듯

장만채 이어 장휘국 선거 실무진 소환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의 선거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팀을 대폭 보강해 사실상 이 업체에 선거 대행 업무를 맡긴 정치인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중앙수사부 회계분석팀 2명에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의 검사 2명을 합류시키면서 CNC 관련 수사팀 규모가 검사 4명에 수사관 10명 등 14명으로 보강됐다. 합류한 검사들은 모두 특수수사 전문가들로, 검찰이 수사 대상을 진보교육감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소속 국회의원 및 후보자들까지 포함하기 위해 기본틀을 잡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은 19일 오후 피내사자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께 출두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CNC와의 계약을 사전에 알았는지, 선거비 부풀리기 공모 여부 등을 집중추궁한 뒤 5시간여만인 19일 새벽 1시께 되돌려보냈다. 또 18일 오후 CNC로부터 하청을 받은 서울·경기지역 선거 관련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팀 보강에 따라 압수수색한 자료에 대한 분석 시간을 단축시켜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을 국회 회기 개시 전에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은 뒤 "CNC 측과 선거대행 의뢰자가 공모를 통해 선거비를 부풀렸는지를 집중수사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CNC의 하청업체 5곳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들과 이미 분석에 착수한 CNC의 견적서, 회계서류 등을 일일이 대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 보전금액과의 차액을 분석중이다. CNC 측이 이들 하청업체와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납품단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만채 도교육감과 장휘국 시교육감 측은 "선관위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으며 부풀리기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18일 검찰에 출석한 장 전남도교육감 역시 "이석기 의원과는 만난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기치료 한다" 8세 장애아 수년간 폭행

광주 특수학교, 70대 여성 기치료사 고소

피해 학생 등교 거부

광주의 한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장애학생을 치료한다며 수년간 폭력을 휘두르며 학대한 70대 여성 기치료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 최근 이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고 있어 아이의 안전을 위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기치료사가 "다른 학생도 치료중"이라고 밝혀 광주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피해 학생을 찾고 있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한 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이 학교에 다니는 뇌병변장애 1급 김모(8·초등 1년 과정)군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서 기치료실을 운영하는 김모(70대 추정)씨에게 상습적으로 수년간 치료를 빙자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김씨를 고소해 왔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고소장을 통해 기치료사 김씨를 상습폭행 및 상해, 아동학대, 불법의료행위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요청했다.

학교 측은 "지난 3월22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한 김군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김군의 온몸에 멍든 사실을 확인하고, 김군의 부모에게 문의한 결과 4년 전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아이가 힘들어 하고,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기치료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군의 부모는 '치료를 받고 나면 아이의 상태가 좋아진다'며 치료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치료사 김씨는 김군의 부모에게 '지체장애를 치료해 주겠다'며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매 치료'를 1시간 이상 진행하면서 김군의 온몸을 폭행했다"며 "치료를 받고 등교한 날 김군은 피오줌과 함께 잦은 구토증상을 보이고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촬영해둔 김군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지난 4월 광주지역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불법 시술인 것은 맞지만 부모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해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아들 친구의 할머니 성폭행 40대 구속

광주광산경찰은 19일 아들 친구의 할머니를 성폭행한 전모(49)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2시 30분께 가출한 아들을 찾으러 광산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가 혼자있던 아들 친구의 할머니 A(72)씨를 성폭행했다.

전씨는 또 같은 날 밤 11시께 또다시 A씨의 집을 찾아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A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예전에 한번 본적이 있는 전씨가 아들을 찾으러 왔다고 해 문을 열어주자 다짜고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내연남 따라간 주부 3주째 행방불명

광주서… 내연남 목매 숨져 수사 난관

내연남과 함께 집을 나섰던 것으로 보이는 40대 주부가 3주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실종자의 내연남이 수사중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1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주부 윤모(43)씨가 광주시 동구 자신의 집 앞에서 내연남 김모(48·금형 엔지니어)씨의 렌터카에 올라탄 것은 지난달 27일 밤 9시15분께였다. "장미축제에 갔다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직후 연락이 끊긴 윤씨는 같은 달 30일 순천 버스터미널 인근 공중전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바람을 쐬러 나왔다"며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다.

윤씨의 남편은 곧장 순천으로 찾아갔지만, 아내를 찾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

경찰은 남편으로부터 지난달 29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일주일 만인 이달 5일 내연남 김씨가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돼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또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아이를 하나 둔 상태였고, 윤씨와 집을 나선지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홀로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와 부모에게 죄송하다.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다.

한편 윤씨의 가족은 "윤씨와 연락이 끊긴 뒤, 함께 사라졌던 김씨 아파트에 대한 압수 수색과 CCTV 분석을 요구했지만 수일 뒤에야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檢, 동구 불법선거 박주선 등 서면 구형 왜?

'위증 논란' 형량 반영 해석… 27일 선고 관심

검찰이 광주시 동구 민주통합당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기소된 박주선 국회의원(무소속·광주시 동구) 등에 대한 구형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면 구형은 중요사건이나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변경된 경우 등 내부적으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지난 18일 열린 불법선거운동 관련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 등에 대해 구형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1일 오전까지 재판부에 구형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이 구형할 피고인은 박 의원을 포함, 유태명(69) 동구청장, 김모(48)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모(46) 박주선 의원 보좌관, 김모(50) 전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 박모(53) 선거캠프 특보 등 6명이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했던 진술을 대부분 뒤바꿔 증인석과 피고인석을 오갔으며, 진술 신빙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사안인 박 의원과 유 청장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지시나 사전 인지 여부, 불법 선거자금 전달 과정 및 경로, 화순식당에서의 동장 모임 참석 당시 박 의원 발언 내용 등을 놓고 당사자들의 법정 진술이 검찰 진술과 엇갈렸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피고인과 증인들에 대해 여러 차례 '위증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위증이나 위증교사 부분을 구형량에 반영하기 위해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도 그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지난 4·11 총선 당시 전국 이슈로 부각된 동구 불법선거 핵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7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엉덩이 만졌다" 시아버지 고소

쌍나팔

○…설거지를 하고 있던 며느리의 엉덩이를 더듬은 엉큼한 40대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고소로 경찰서행.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자신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던 며느리 B(20)씨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

○…B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경찰서를 찾았는데, A씨는 경찰에서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 같아 엉덩이를 가볍게 다독였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2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2타경 196	1	서구 화정동 830 3동 5층 505호 60.67㎡	아파트	73,000,000 73,000,000	
2012타경 3607	1	동구 운림동 583 101동 6층 601호 84.97㎡	아파트	140,000,000 140,000,000	
2012타경 3959	1	서구 금호동 742-1 해광대덕무지개아파트 101동 2층 203호 84.91㎡	아파트	125,000,000 125,000,000	관리비는213,270원이미납
2012타경 4419	1	서구 염화로40번길 20-1, 3동 13층 1304호 [화정동,태영아파트] 59.93㎡	아파트	85,000,000 85,000,000	
2012타경 5955	1	서구 양동 61 금호맨션 가동 8층 803호 142.55㎡	아파트	150,000,000 150,000,000	
2012타경 6057	1	남구 화산로 20, 102동 22층 2202호 [진월동,대주파크빌] 84.9996㎡	아파트	220,000,000 220,000,000	
2012타경 6200	1	서구 금호동 613-6 진흥더블파크아파트 103동 14층 1402호 120.297㎡	아파트	280,000,000 280,000,000	관리비243,000원이미납
2012타경 8206	1	북구 문흥동 787-1 108동 5층 508호 59.39㎡	아파트	82,000,000 82,000,000	
2012타경 8572	1	남구 백운동 46-1 101동 6층608호 84.42㎡ [2012.4까지관리비1개월분이미납된상태임]	아파트	120,000,000 12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2타경 3201	1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291-1 171㎡	대	91,725,080 91,725,0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건물현황은목조스레트지붕임
		동소 292 434㎡	대		
		동소 292 70.16㎡ 부속건물 33.82㎡[축사] 44.4㎡[창고] 제시외 창고 3.3㎡	단독주택		
2012타경 3461	1	동구 산수동 546-43 152.7㎡	대	94,002,700 94,002,7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546-43 53.22㎡ 부속건물 2.31㎡[문간] 7.93㎡[목욕탕등]제시외 가추등43.1㎡	단독주택		
2012타경 4730	1	북구 신안동 481-4 127.3㎡	대	113,706,240 113,706,2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481-4 1층74.37㎡ 2층61.88㎡ 부속건물 1.08㎡[변소] 제시외보일러실등19.09㎡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 2932	1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407 1953㎡[공유자 황인성지분2분의1전부]	임야	6,835,500 6,835,500	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제한있음
	2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137-8 546㎡	답	13,968,000 13,968,000	일괄매각.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37-9 882㎡	답		
		동소 137-11 318㎡	답		
	3	동소 1373 3164.4㎡	답	34,808,400 34,808,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4563	1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358-1 240㎡[공유자 이규선지분17분의2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소재하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234,390 234,390	현황은묵전.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2	곡성군 옥과면 율사리 213-1 707㎡[358-1번지와지분동일][현황은논]	전	3,845,580 3,845,580	일괄매각.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동소 213-5 185㎡[358-1번지와지분동일][현황은견사부지.견사는매각대상이아님]	전		
2012타경 5184	1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31-6 1111㎡[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1,809,900 11,809,900	일괄매각.목록1,2분묘소재하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동소 49-16 1063㎡[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동소 187-1 50㎡[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012타경 6491	2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3-1 614㎡[공유자 정남례지분2분의1전부]	답	11,079,750 11,079,750	일괄매각.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제한있음
		동소 14-1 977㎡[13-1번지와지분동일]	답		
		동소 14-2 1016㎡[13-1번지와지분동일]	답		
2012타경 6538	1	서구 양동 416-4 440㎡[공유자김인재지분6분의1전부][일부현황도로임.매각외주택등소재하고있으며,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14,006,030 14,006,030	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2012타경 7463	1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 182-14 660㎡	임야	9,138,000 9,138,000	현황은밭.지상의수목을포함
2012타경 7968	1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8 1312㎡[지상의수목을포함]	전	10,184,000 10,18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8077	1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500-4 1347.3㎡	답	14,820,300 14,820,3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2타경 3331	1	북구 신안동 134-7 12층 1222호 26.25㎡	근린시설	25,000,000 25,000,000	
2012타경 3737	2	서구 금호동 268-1 금호동진흥더루벤스 상가동 1층 103호 78.0203㎡	근린시설	126,720,000 126,720,000	
[기타]					
2012타경 6491	1	광산구 본량복만길 218-7 100.75㎡	잡실	17,933,500 17,933,500	
2012타경 7708	1	광산구 용동 668-2 1321.8㎡	공장용지	442,226,880 442,226,8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668-2 1층595.35㎡ 2층90㎡ 부속건물 116.3㎡[사무실,숙직실]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2. 7. 4.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2. 7. 11.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2. 6. 2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광의